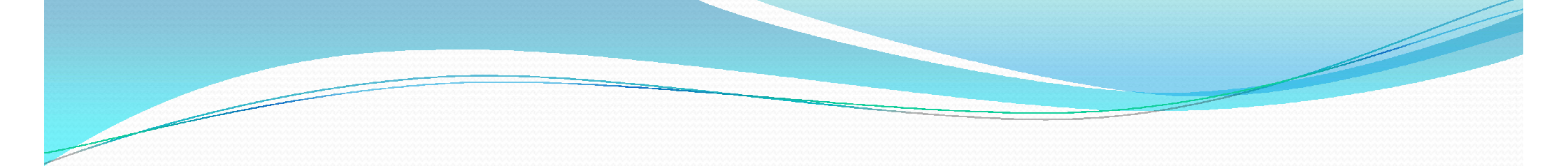


호남광역경제권 산업과 일자리 동향

2012. 2.

송 영 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1. 호남광역경제권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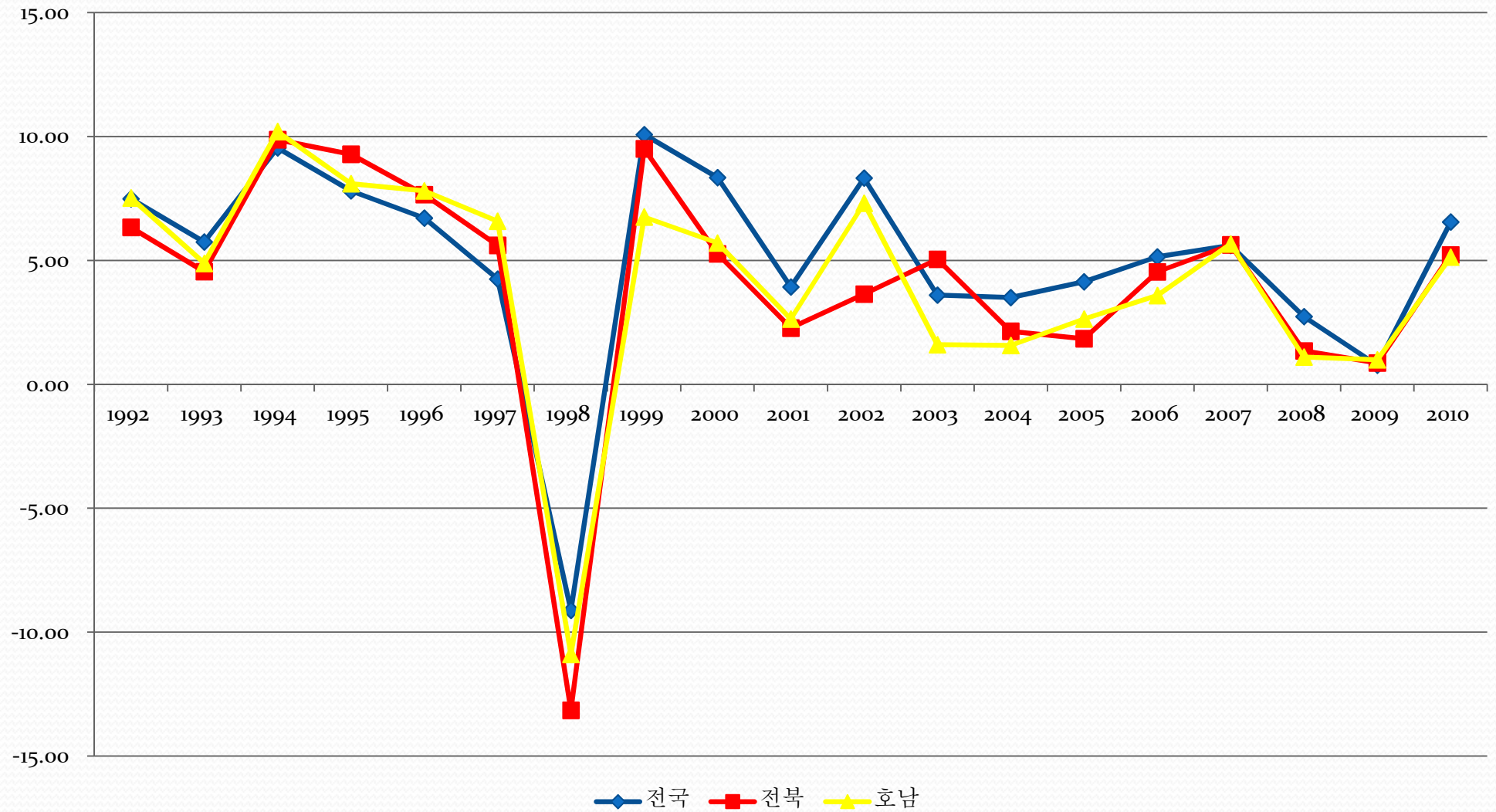
2. 호남광역경제권 일자리 동향

3. 선도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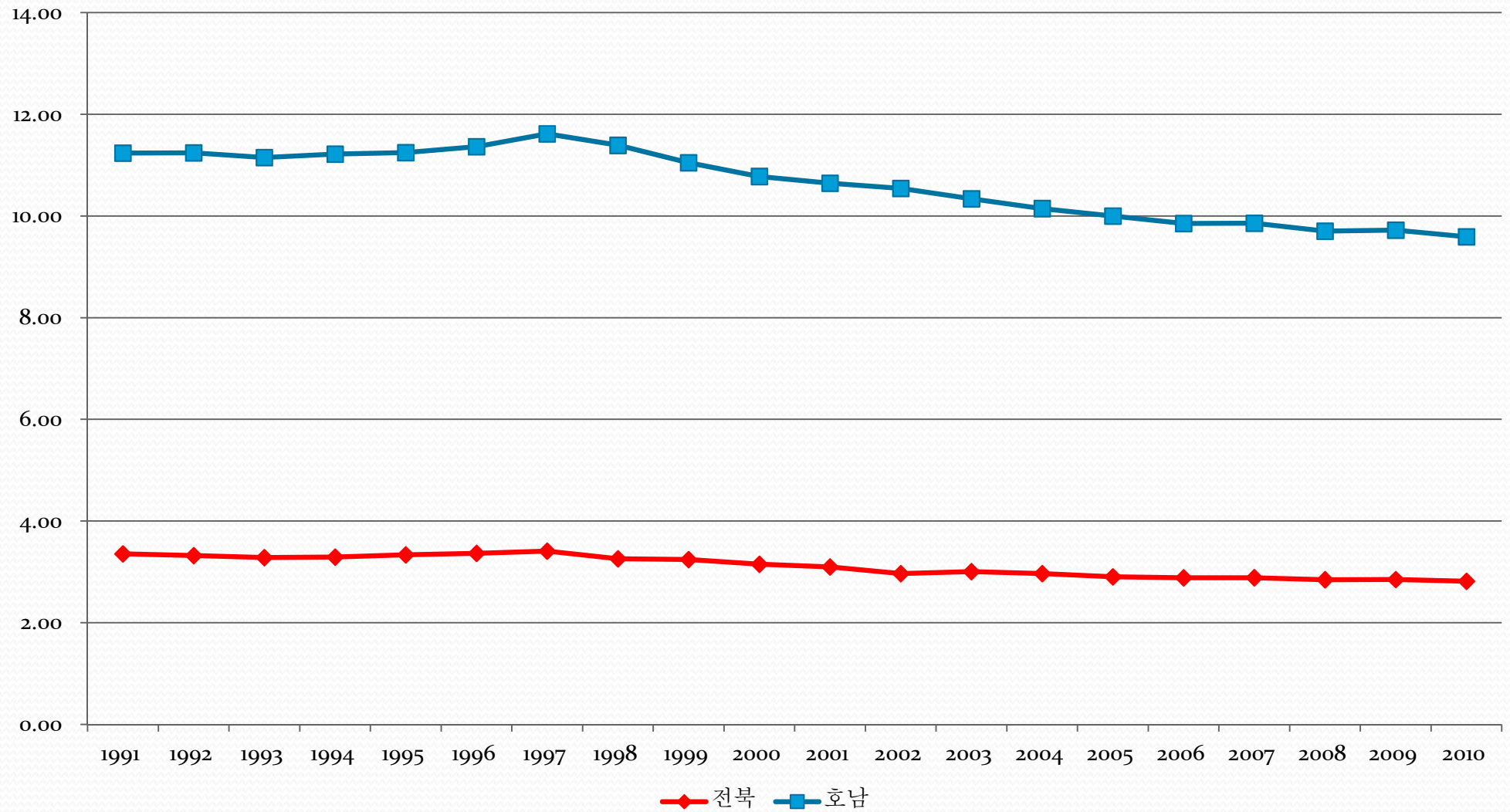
4. 정책 제언

1. 호남광역경제권 산업 동향

실질경제성장을 추이(1991~2010년) - 전북, 호남



GRDP 점유율 추이 - 호남광역경제권,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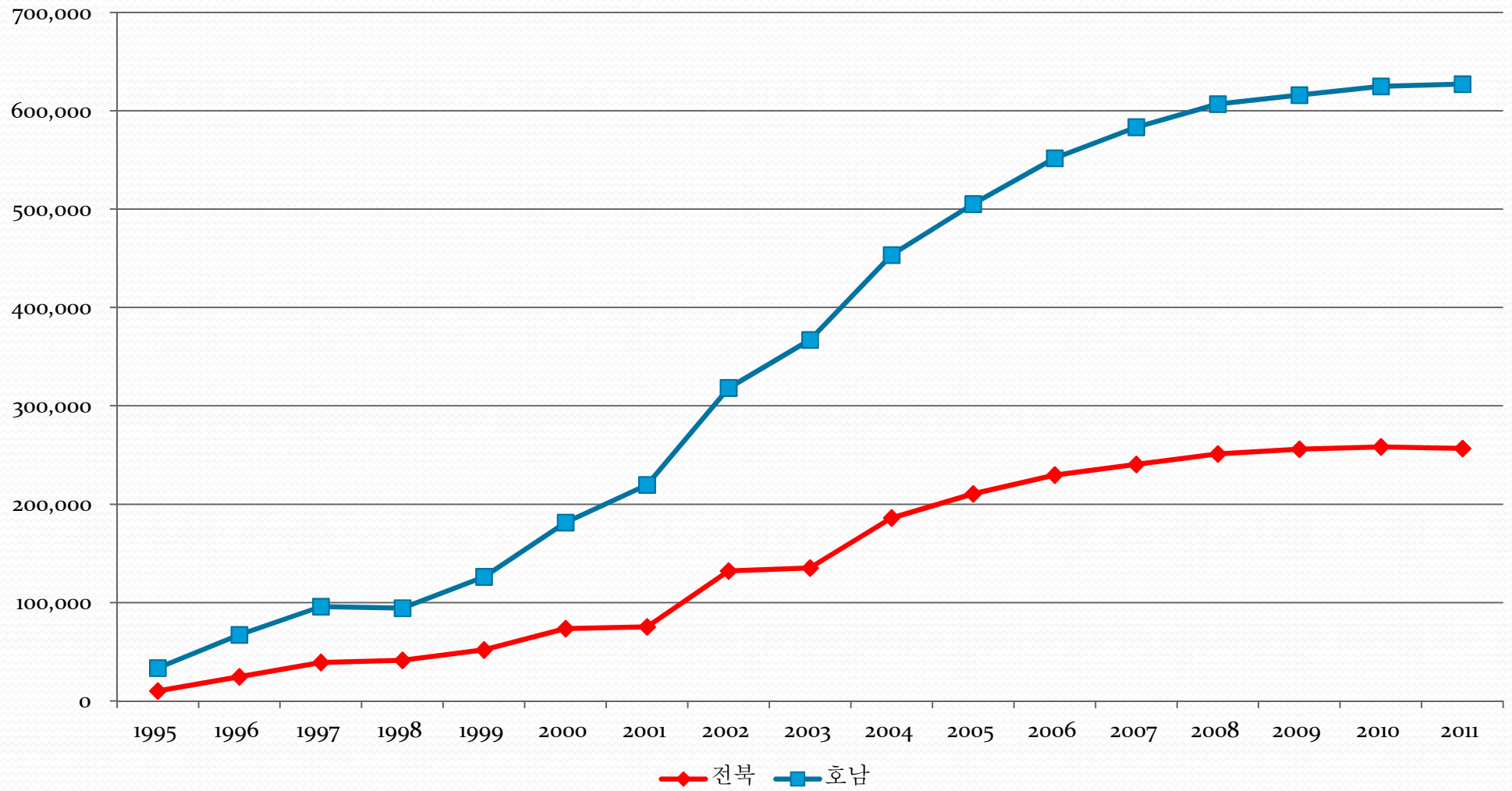


1인당 실질 GRDP

단위 : 만원

	1995	2000	2005	2010
전국	1,287.22	1,503.67	1,847.96	2,191.87
전북	1,006.51 (78.2%)	1,153.70 (76.7%)	1,417.81 (76.7%)	1,685.72 (76.9%)
호남	1,234.81 (95.9%)	1,424.33 (94.7%)	1,735.99 (93.9%)	2,045.01 (93.3%)

누적 순인구유출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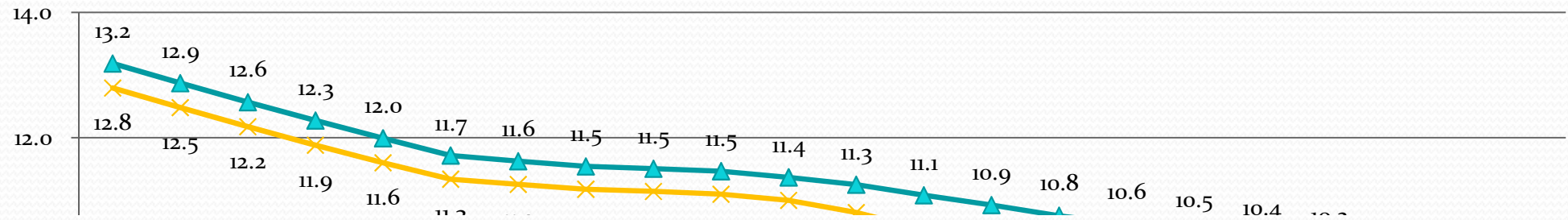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유출자수(1995~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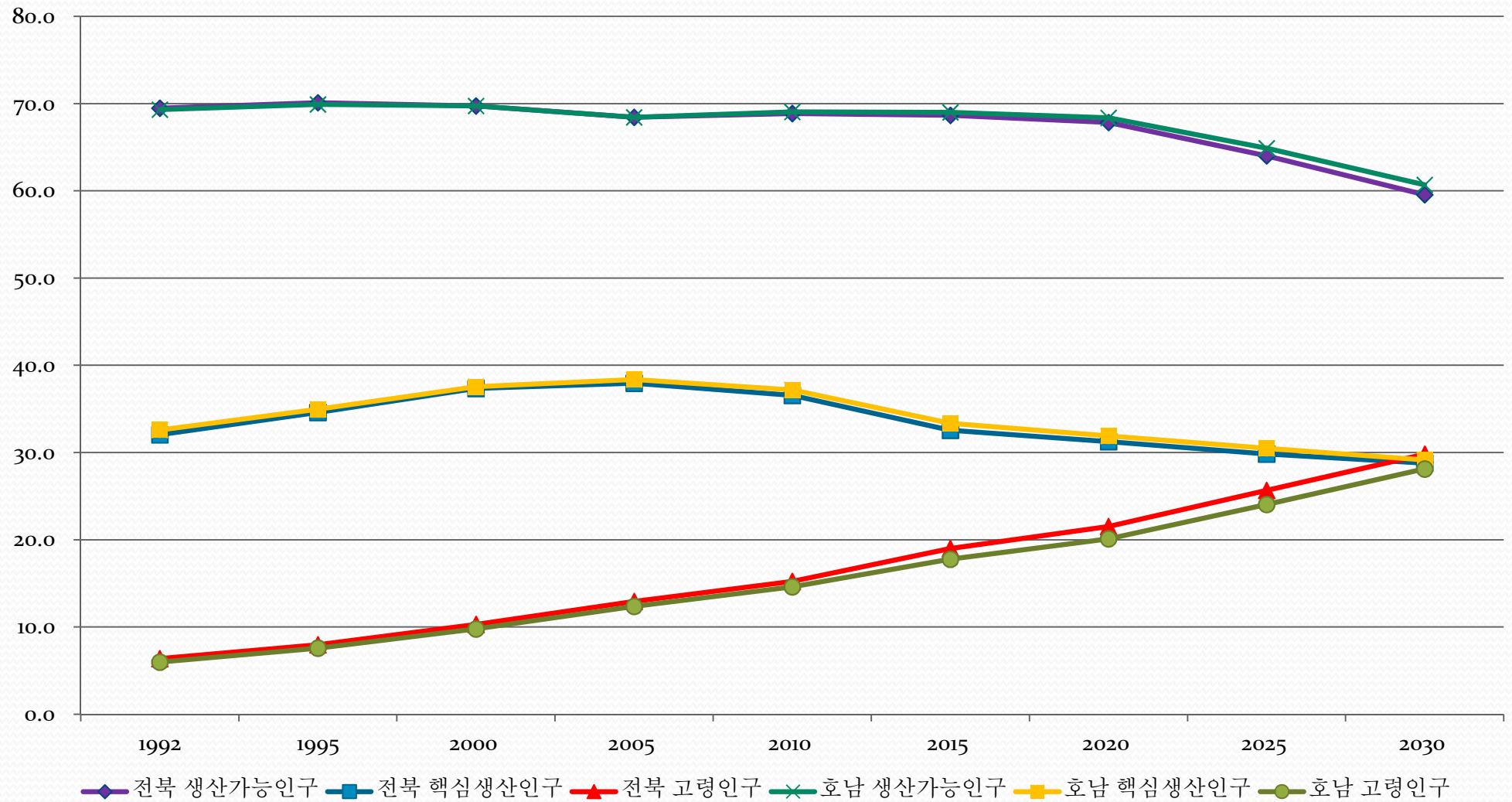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령	전북	호남
0 - 14세	2,820	8,240
15 - 24세	-139,194	-369,495
25 - 49세	-107,522	-232,541
50 - 64세	-999	-5,822
65세 이상	-11,746	-27,571

전국대비 인구비율 (1990-2011) - 전체 및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핵심생산인구, 고령인구 비중 추이



호남광역경제권 산업구조

단위 : %

구분	전국		전북		호남	
	1991	2010	1991	2010	1991	2010
농림어업	5.2	2.9	16.1	11.1	12.8	8.4
광업제조업	26.1	31.3	22.6	25.4	28.0	31.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5	2.2	0.8	1.5	1.3	3.0
건설업	11.7	6.2	11.3	8.4	13.1	7.7
서비스업	55.4	57.3	49.3	53.7	44.9	49.4

산업별 연평균 실질성장률(1991~2010년)

단위 : %

	전국	호남	전북
농림어업	1.8	2.1	2.4
제조업	6.1	5.3	5.4
서비스업	5.3	5.0	4.9

제조업 중분류에 의한 5대 업종(2009년)

단위 : %

전국		전북		호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2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의약품 제외	1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의약품 제외	17.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14.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	식료품 제조업	1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 제품 제조업	14.4
1차 금속 제조업	7.0	1차 금속 제조업	6.4	1차 금속 제조업	12.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5

호남권 선도전략산업 매출액 기준 기업체 수

단위 : 개, %

	호남	전북
50억 미만	1,247(68.0)	262(53.6)
50억~100억 미만	229(12.5)	85(17.4)
100억~200억 미만	178(9.7)	74(15.1)
200억 이상	175(9.6)	69(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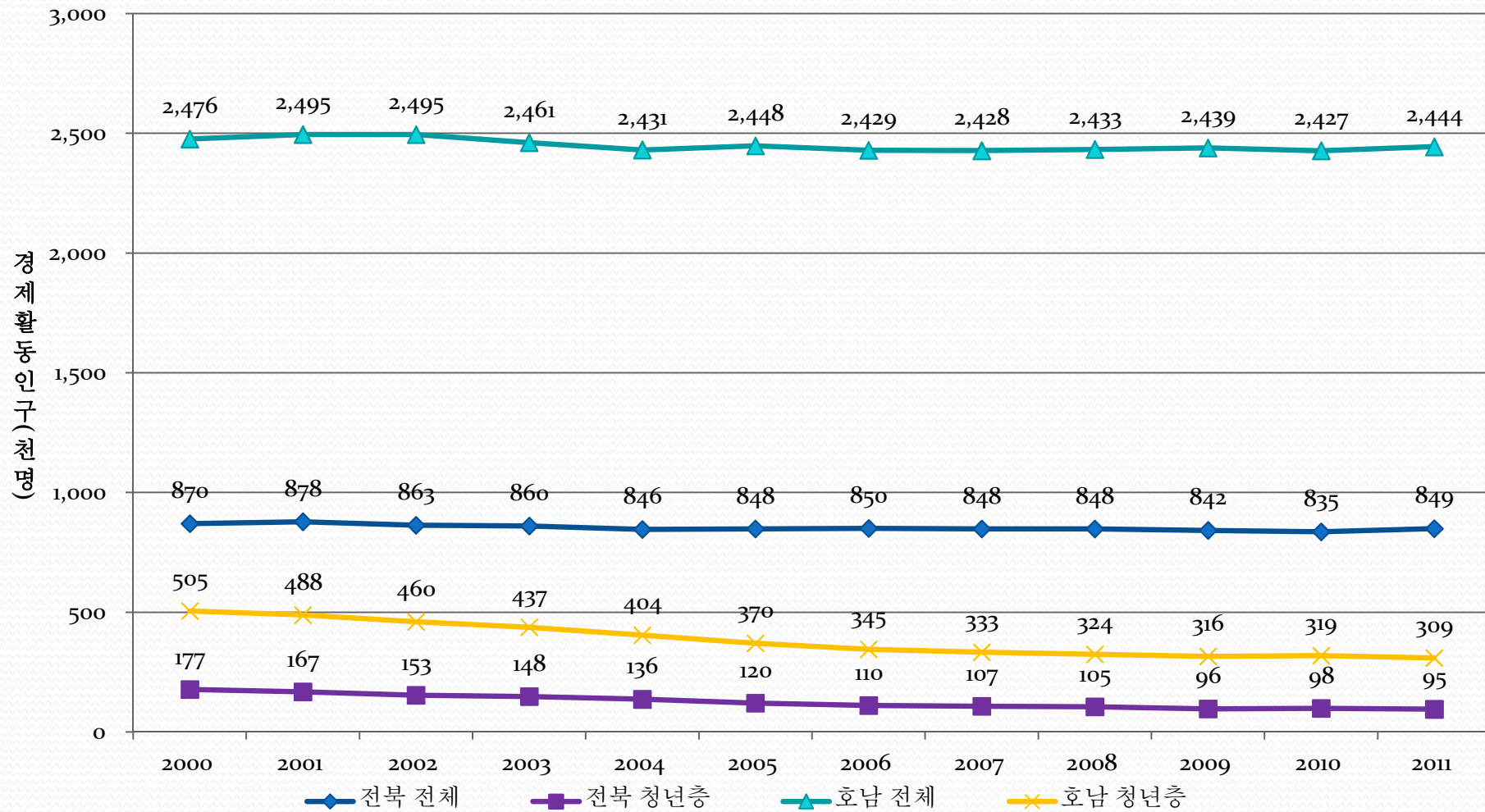
호남권 선도전략산업 종사자수 기준 기업체 수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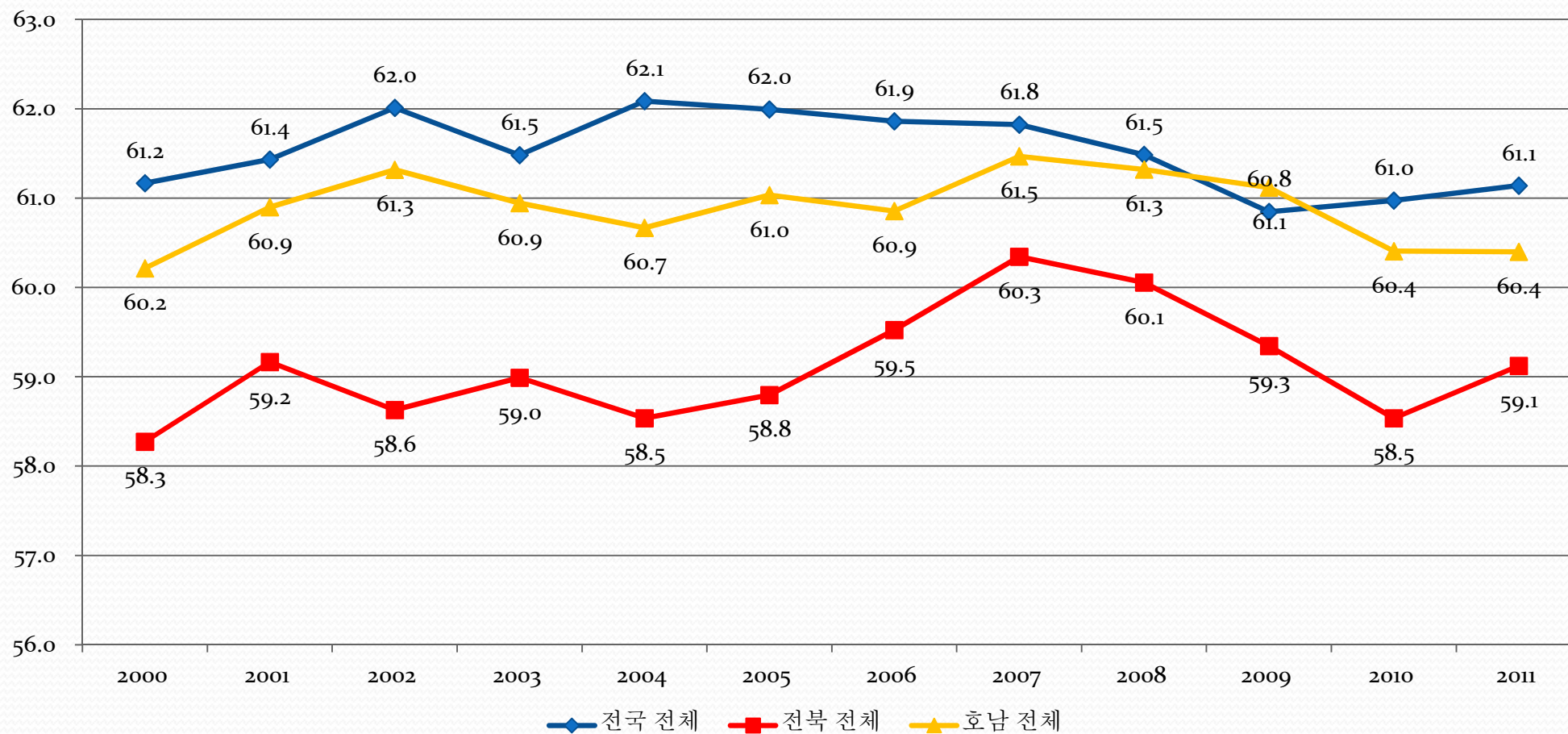
	호남	전북
50명 미만	1,428(81.2)	346(70.8)
50명~99명	156(8.5)	85(13.1)
100명~299명	132(7.2)	55(11.2)
300명 이상	28(2.5)	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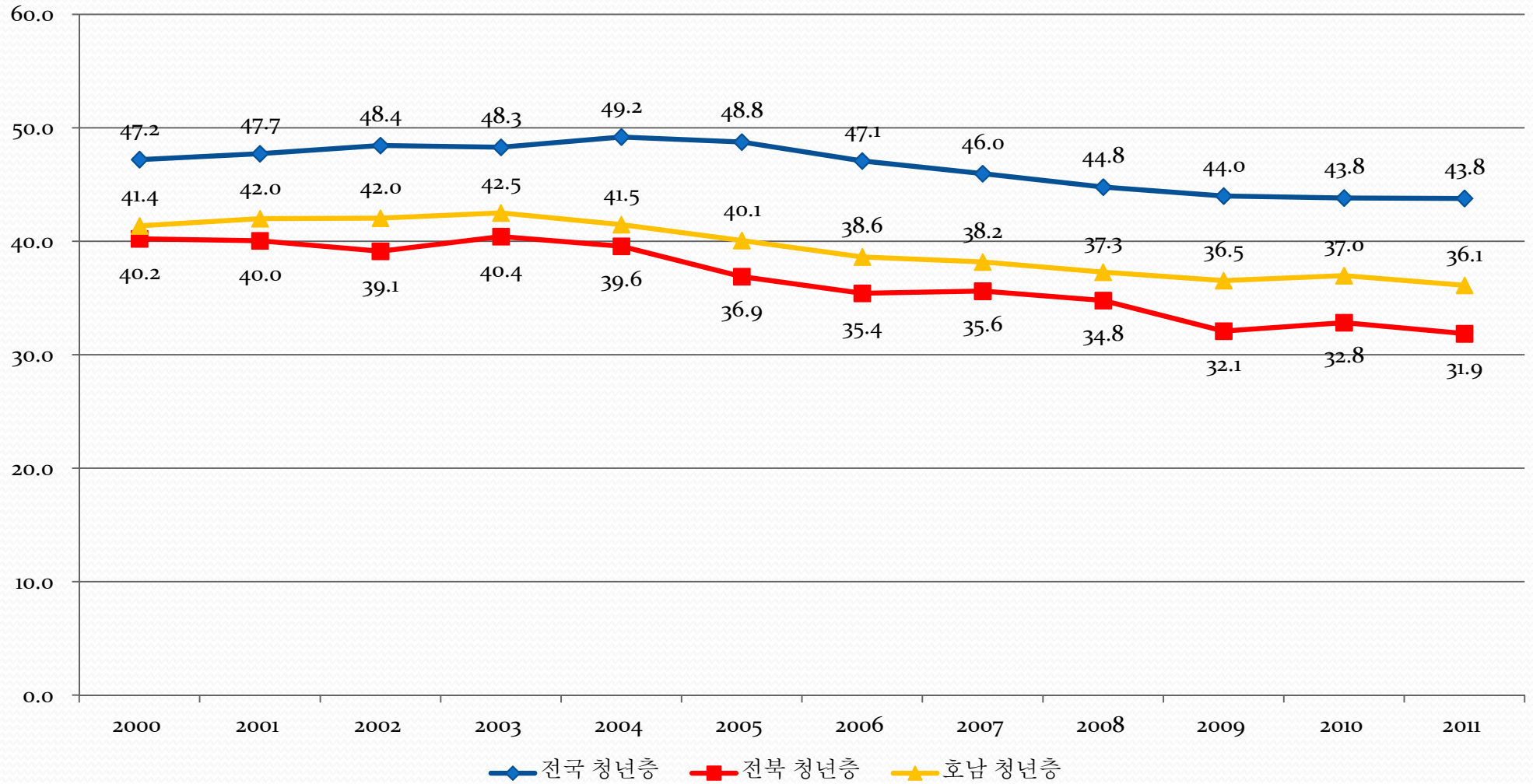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의 추이-전체 및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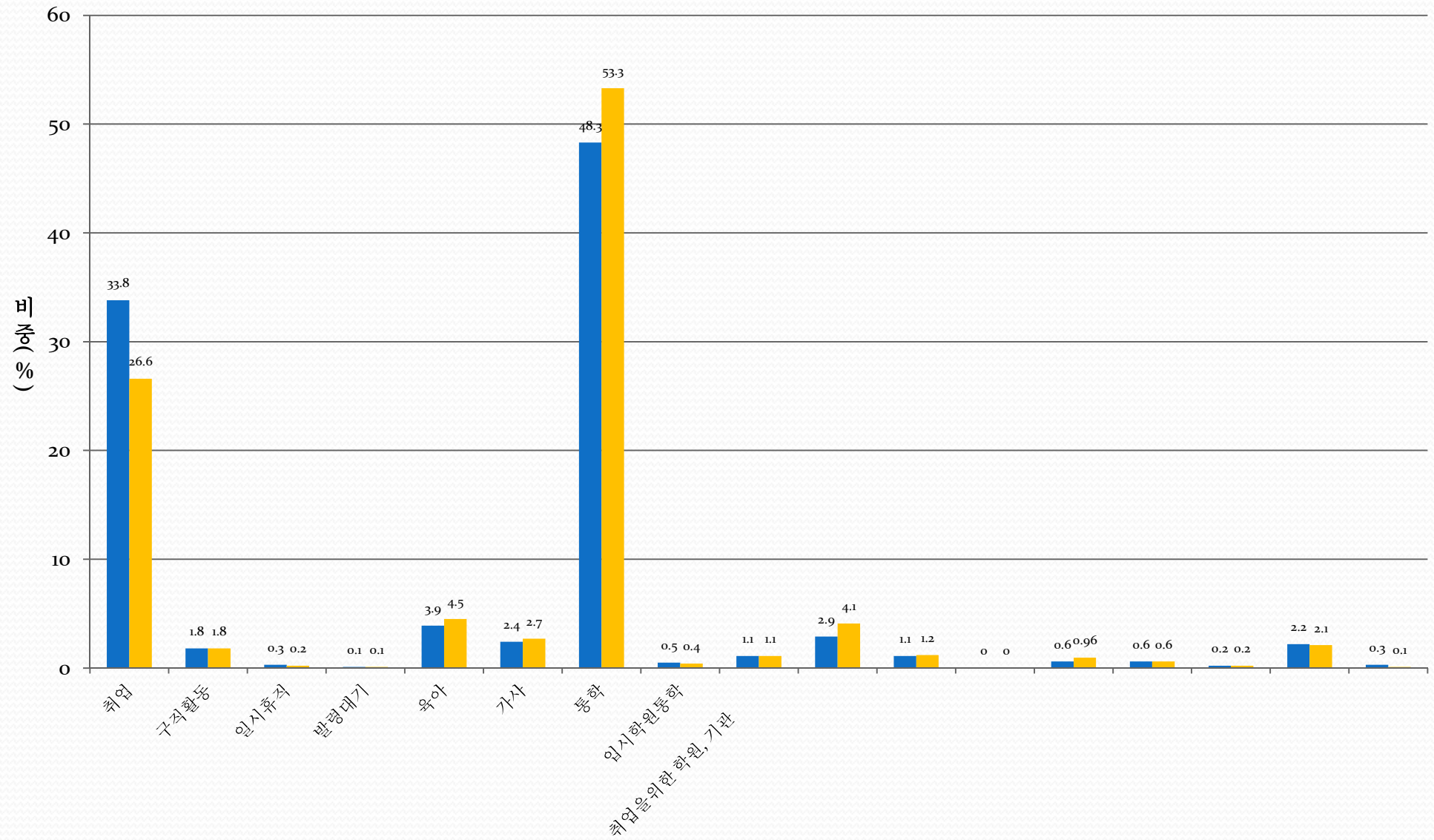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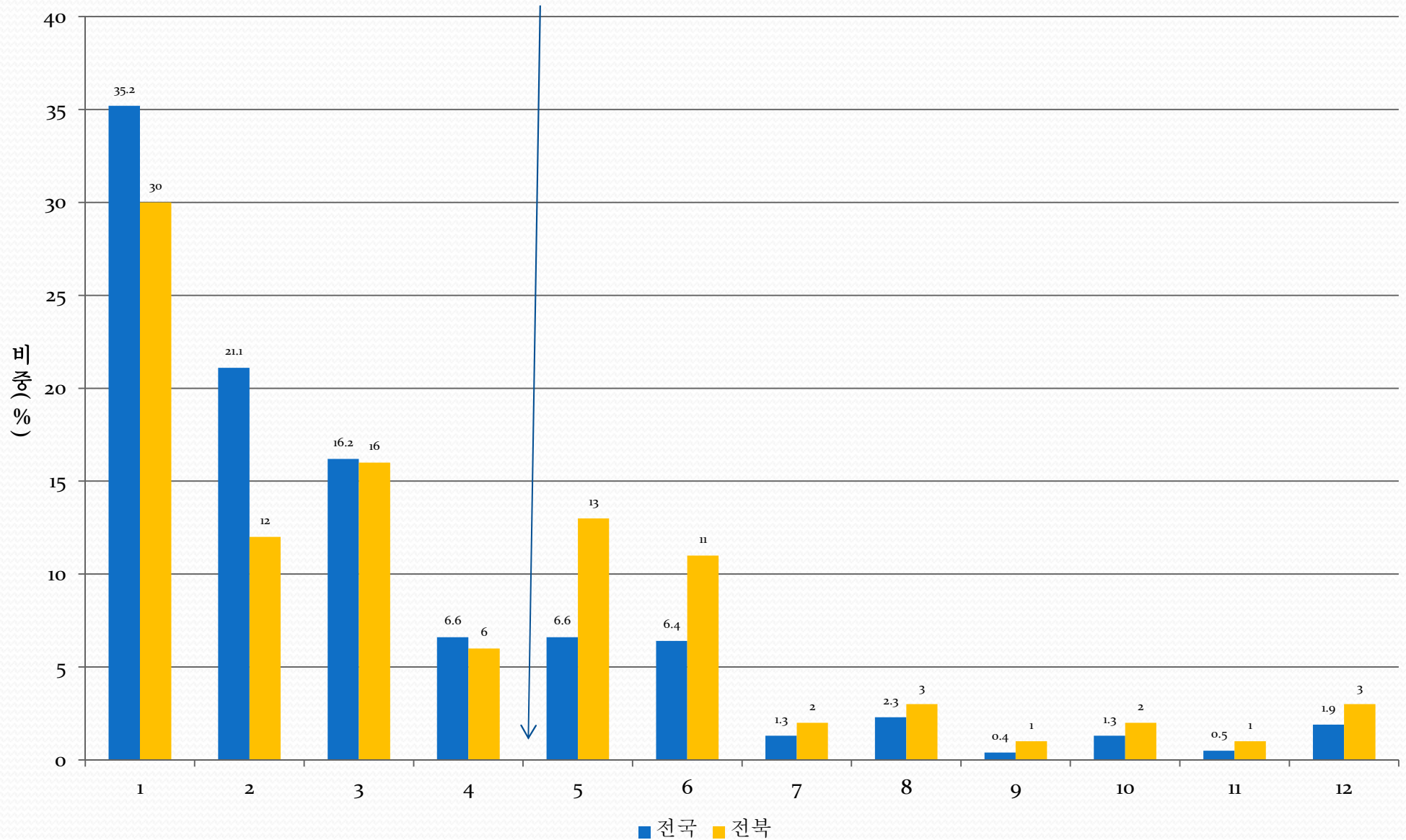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청년층 인구의 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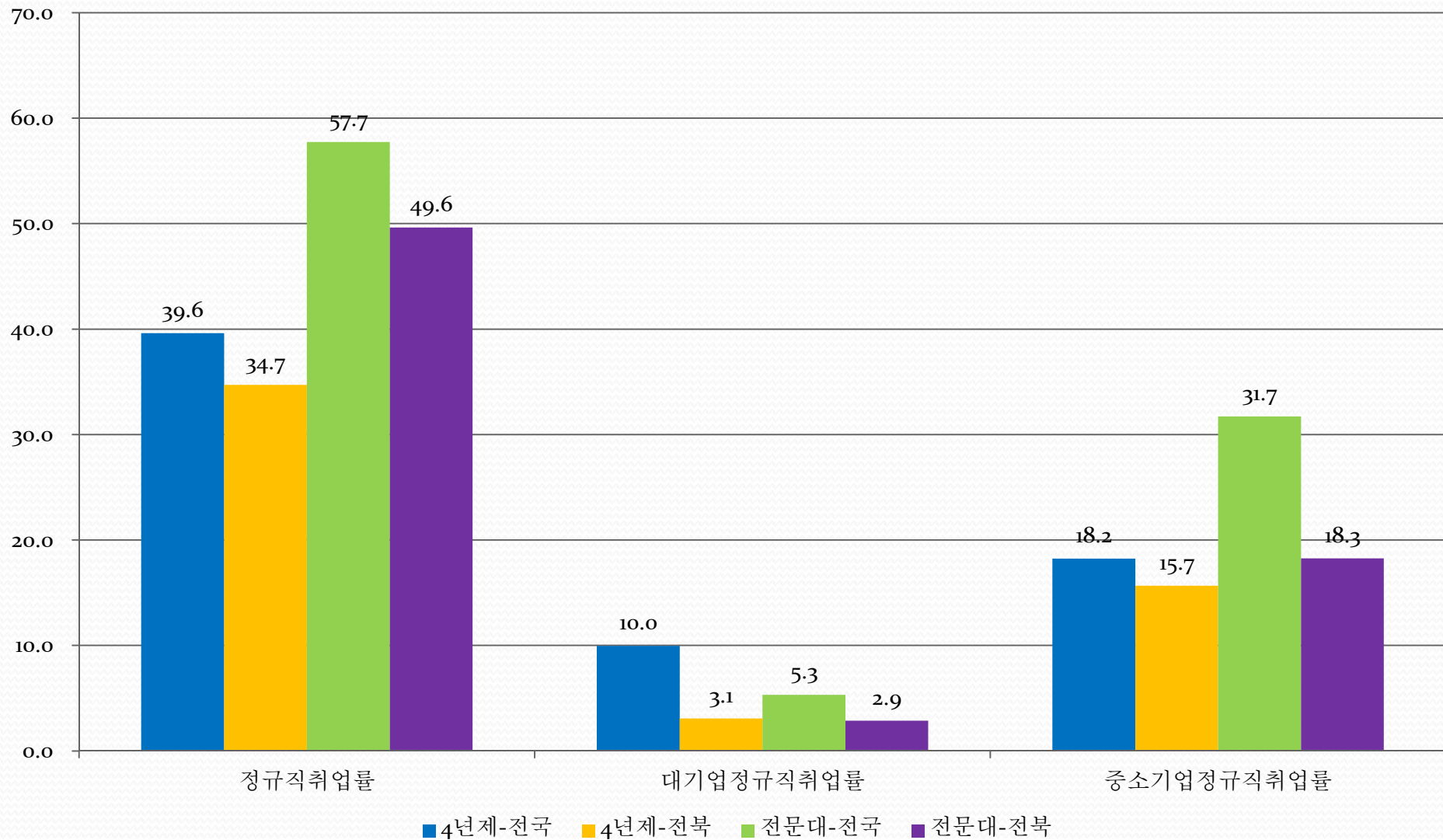
청년층 구직활동기간 분포 - 전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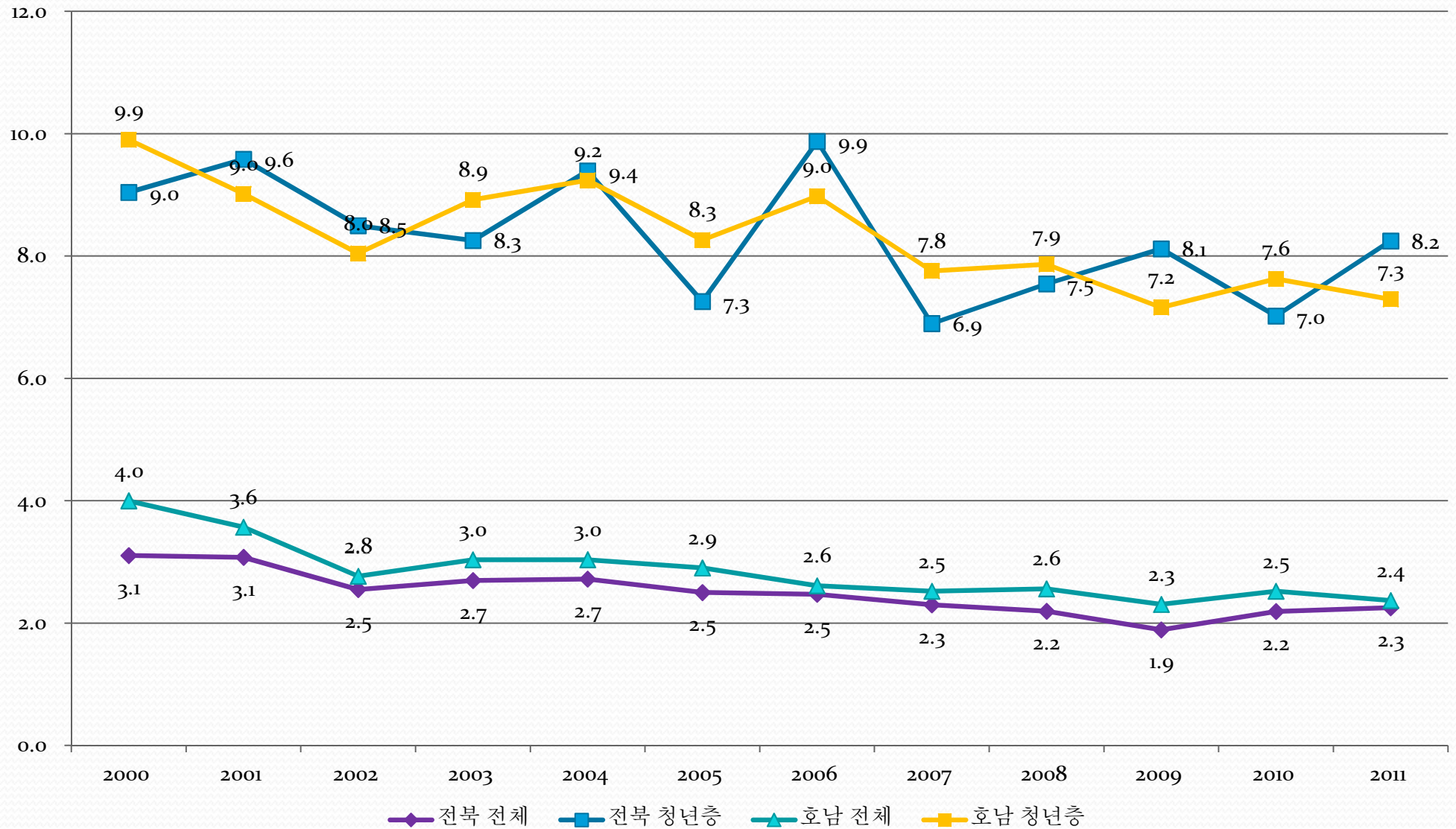
시도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대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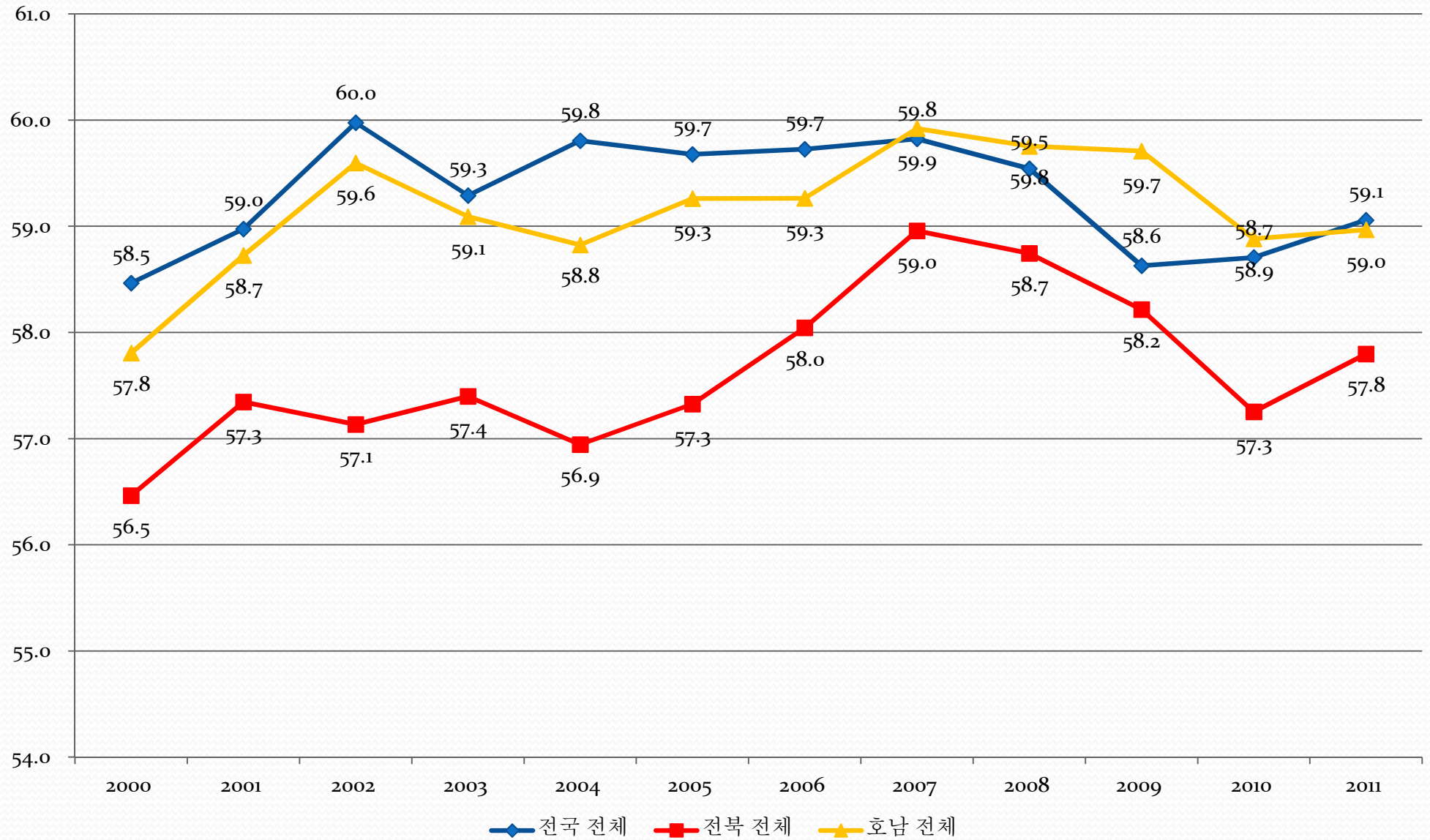
시도별 4년제 및 전문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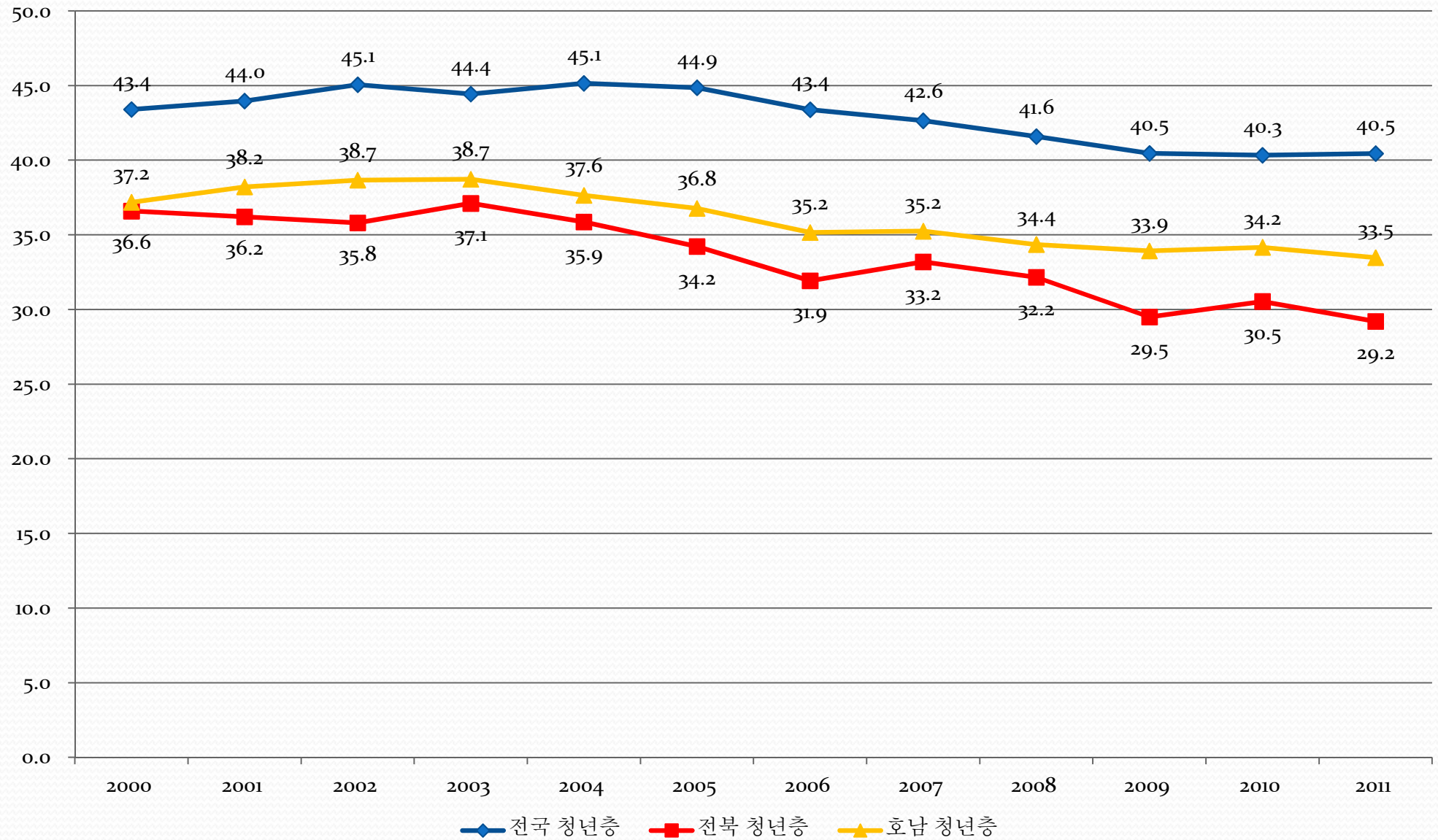
전체 및 청년 실업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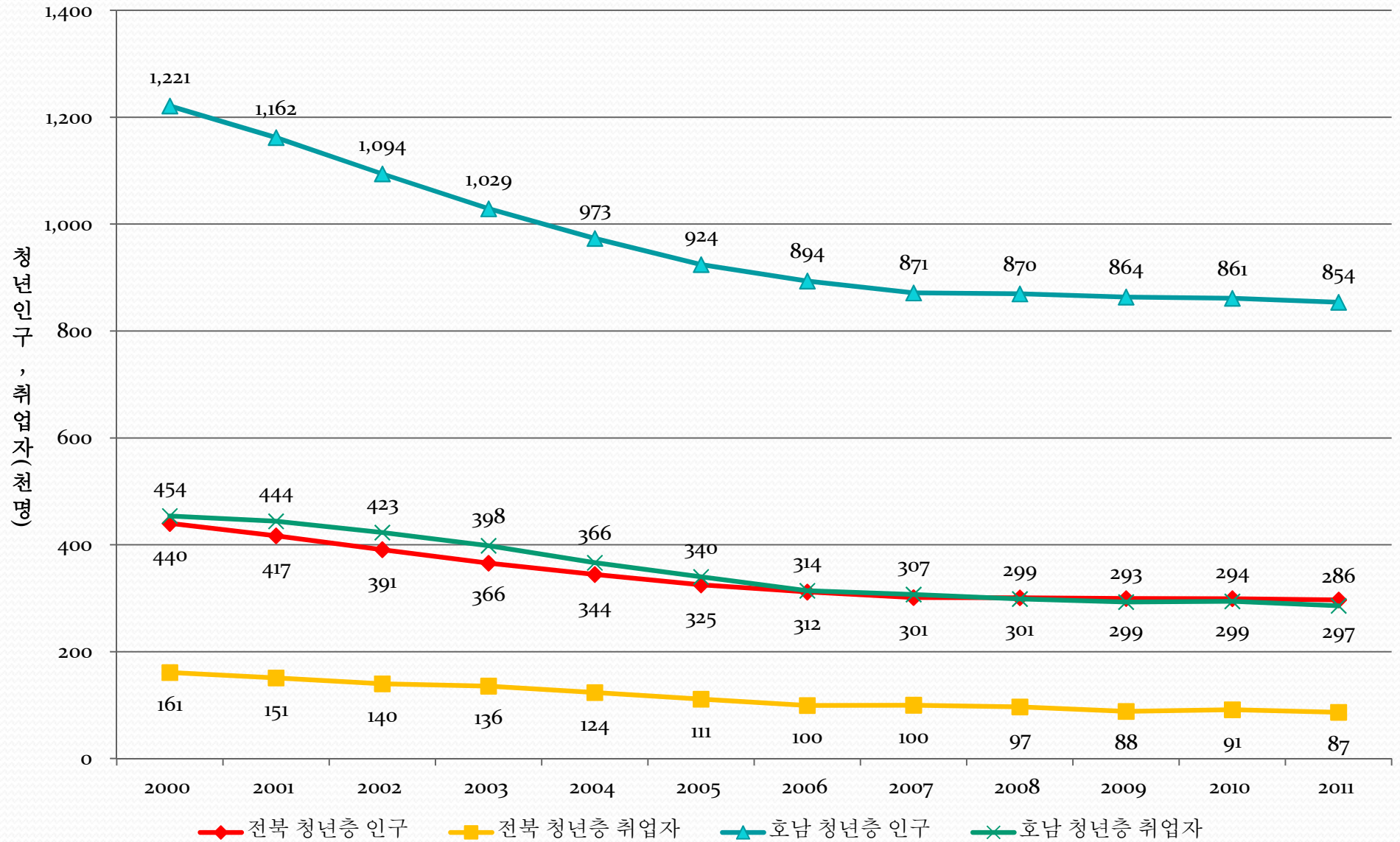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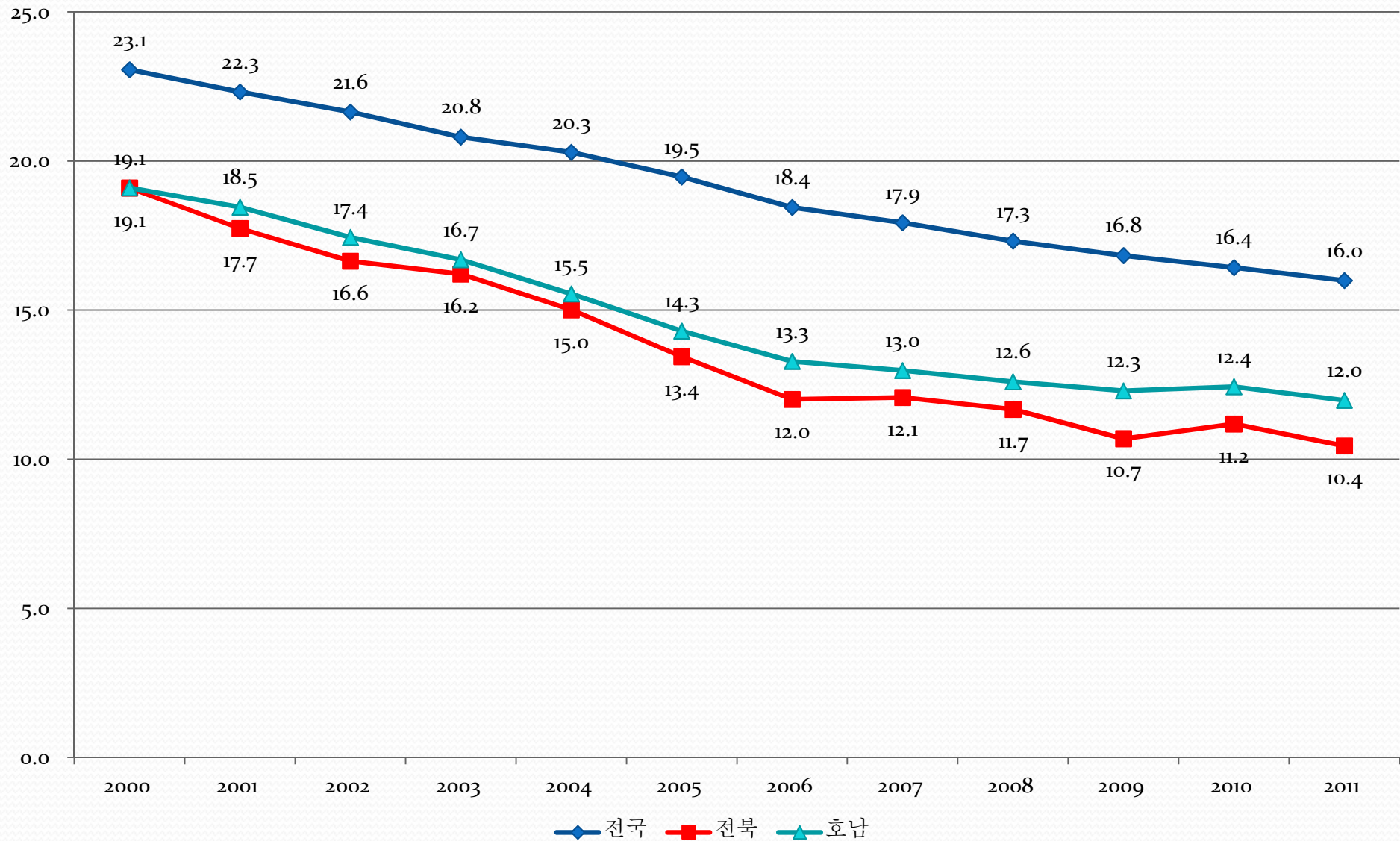
청년층 고용률 추이



청년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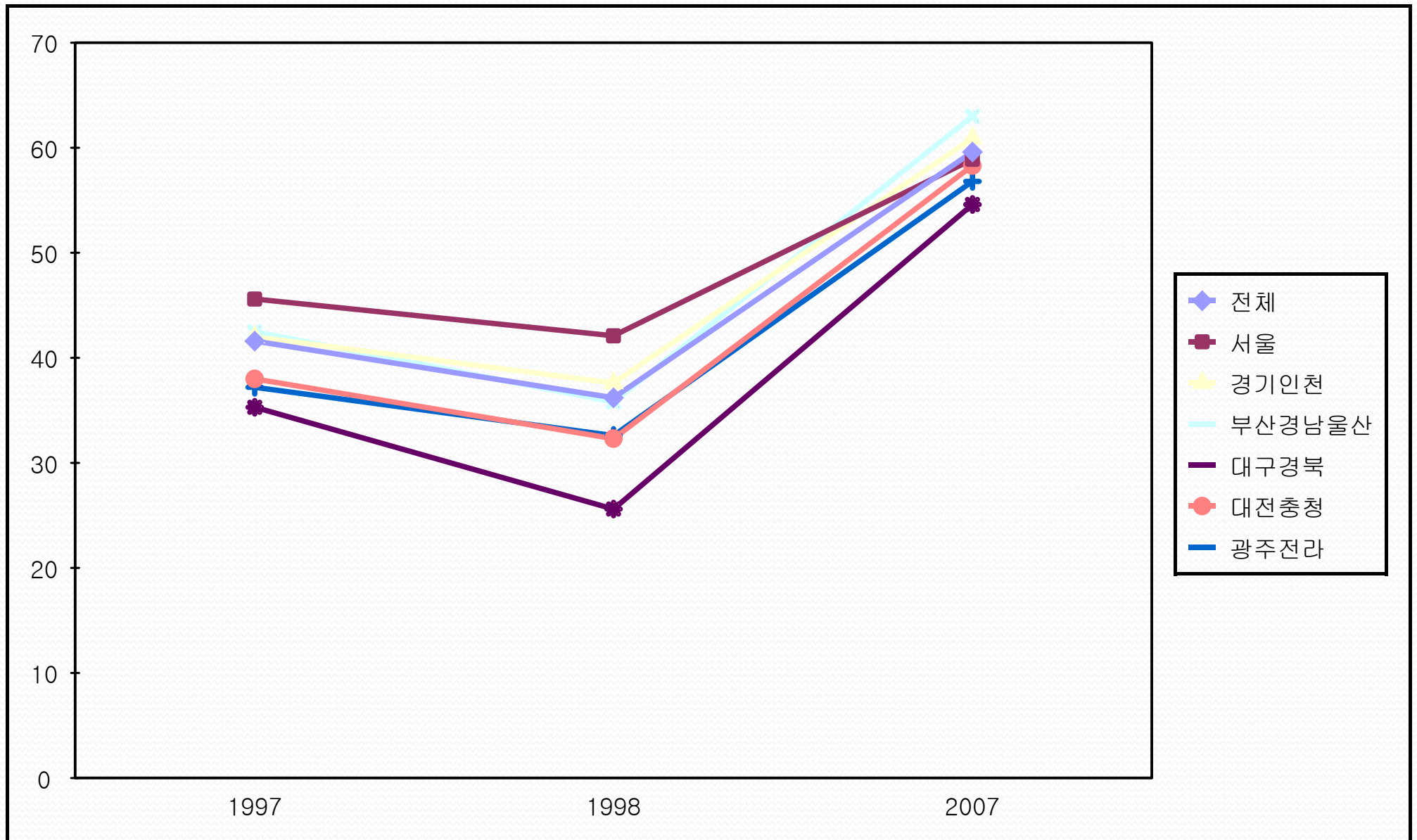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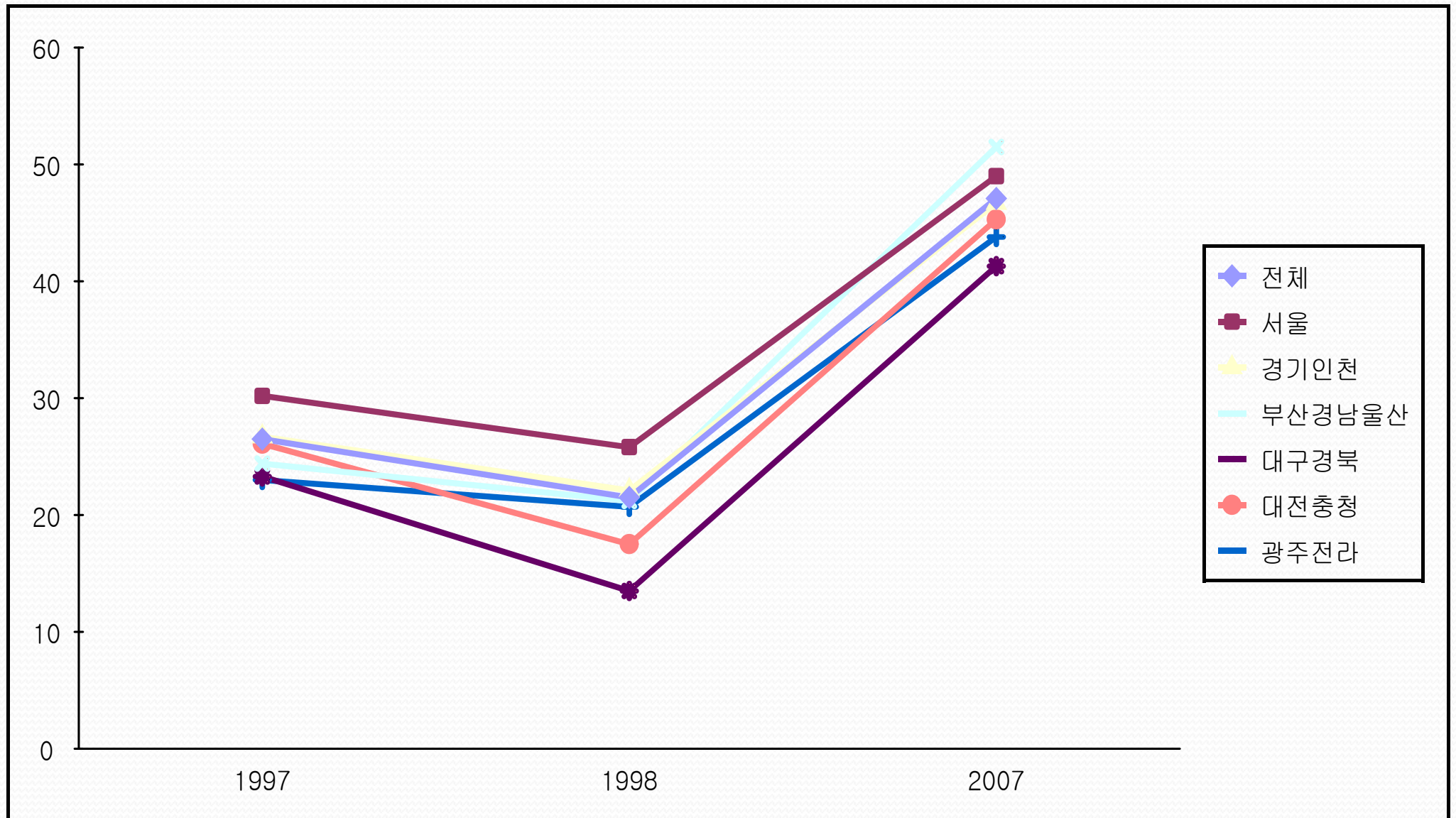
전라북도 청년층 노동시장 이동 형태

구분	상태변화	명	(%)
ST(stable type)안정형	정규직 ---→ 정규직	12195	(11.9)
UT(unstable type)불안정형	정규직 ---→ 비정규직	15114	(14.7)
BT(bridge type)가교형	비정규직 ---→ 정규직	41534	(40.4)
TT(trap type)함정형	비정규직 ----→ 비정규직	33964	(33.0)
전 체		1028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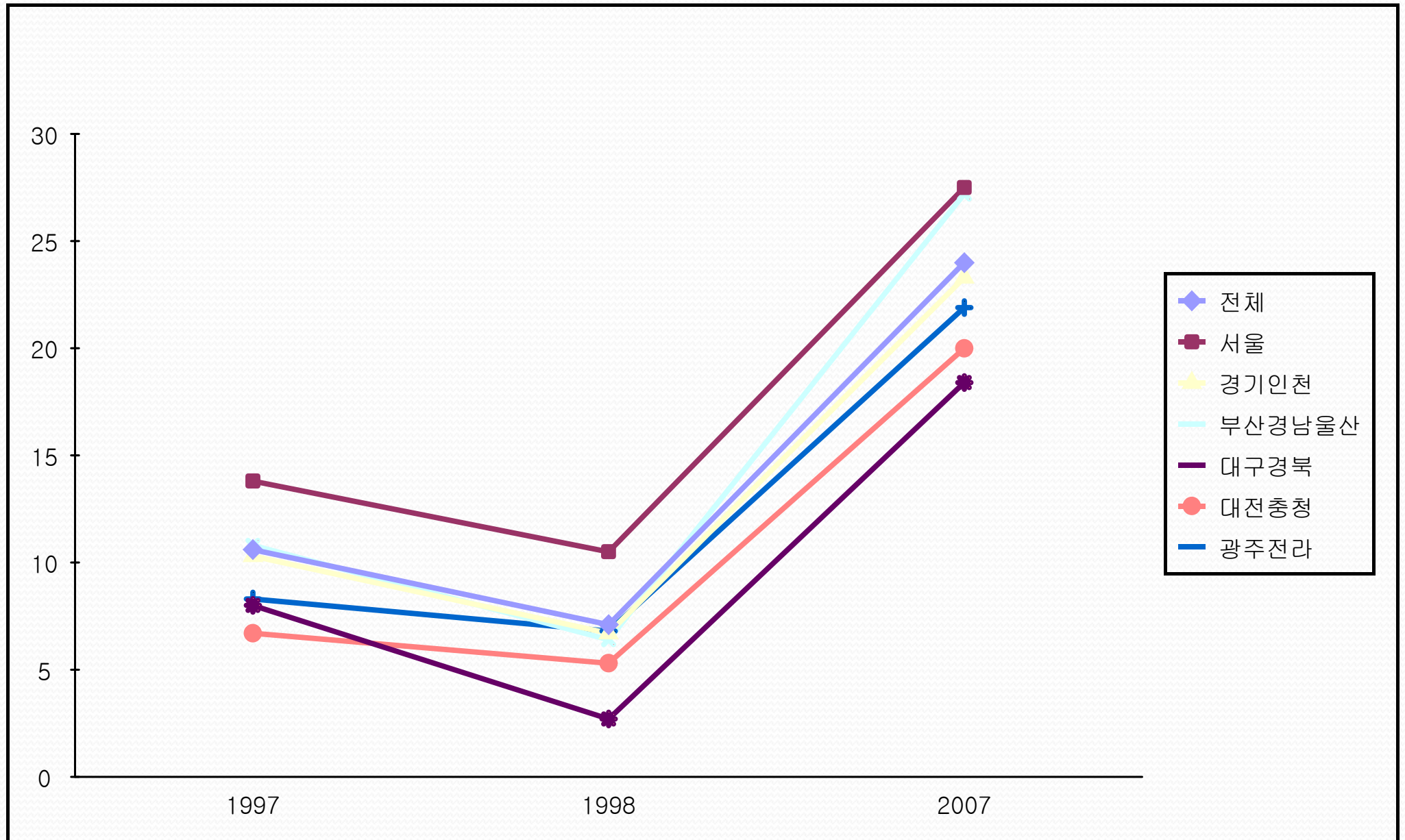
‘괜찮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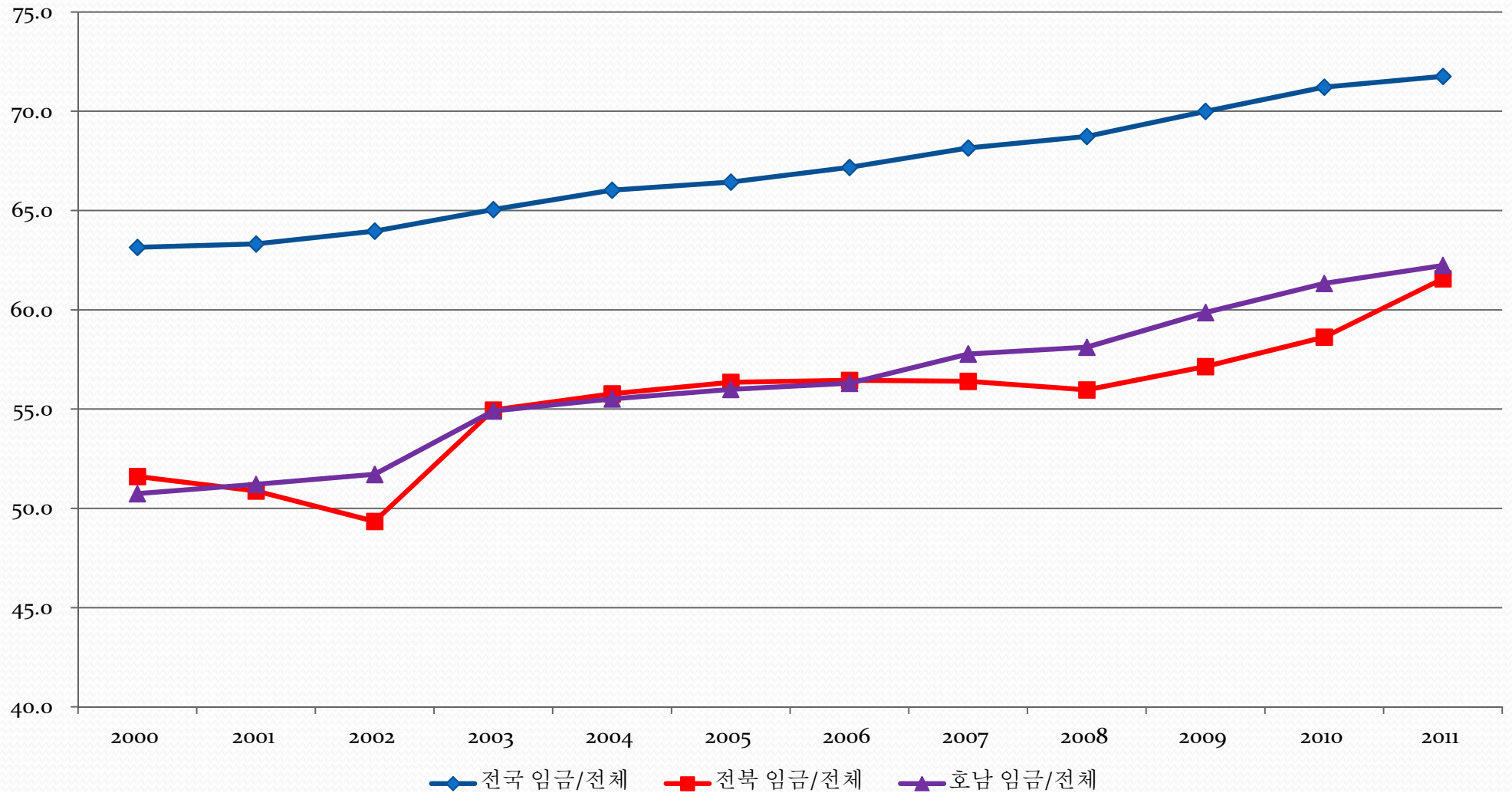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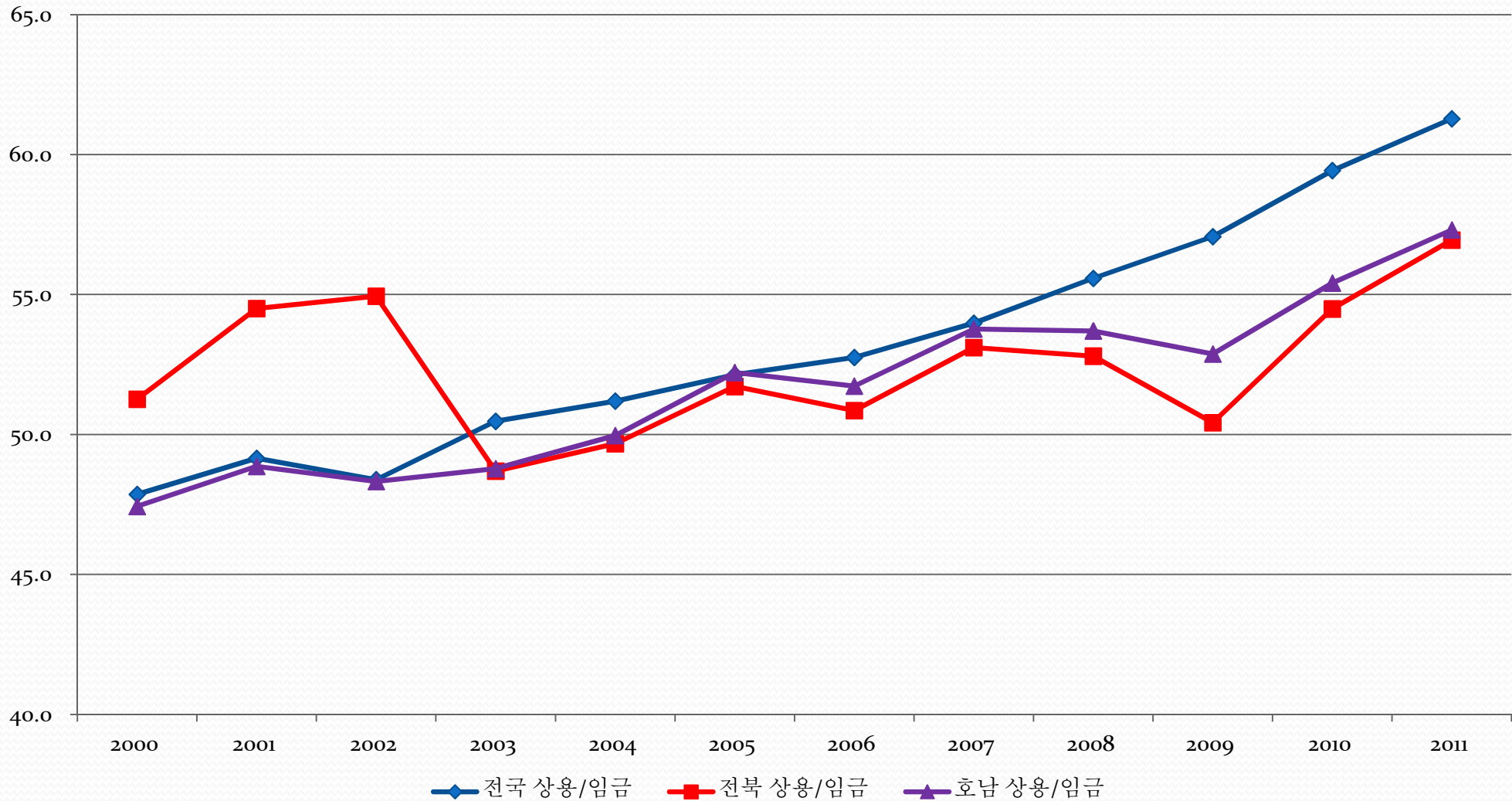
‘아주 좋은 일자리’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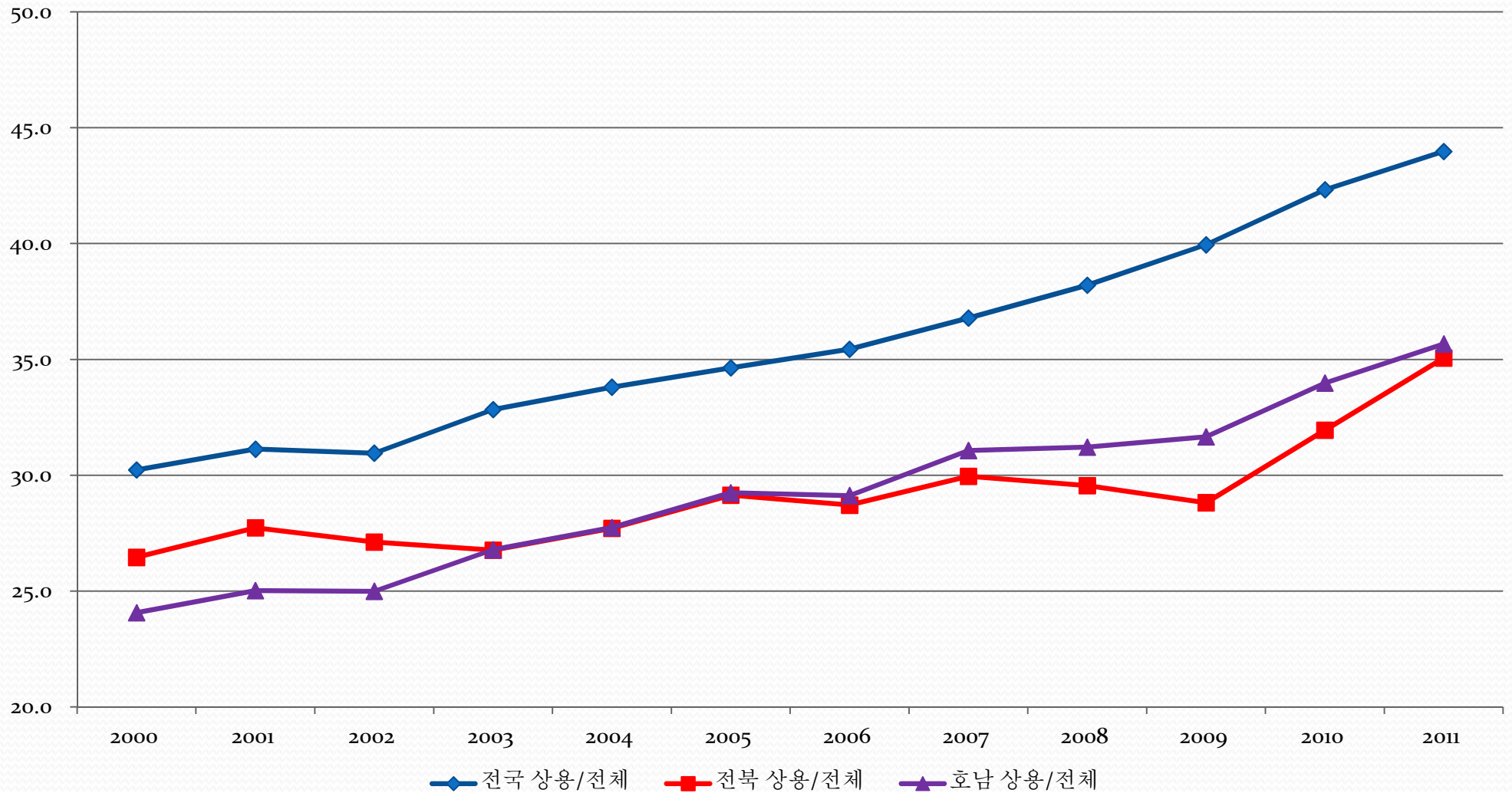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임금노동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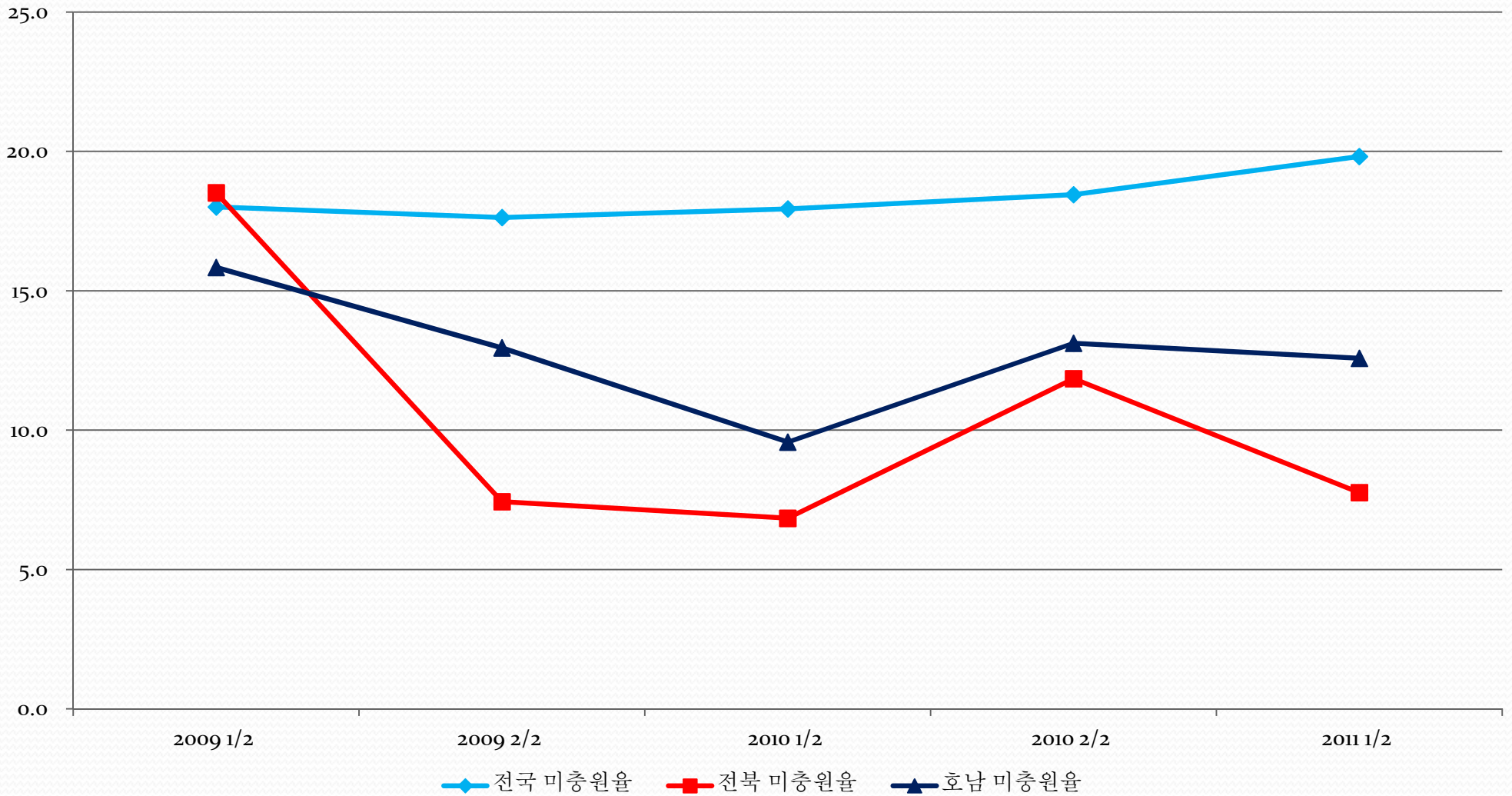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 - 임금노동자 중 상용노동자 비중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비교 -전체 근로자 중 상용노동자 비중



지역별 미충원율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의 추이(전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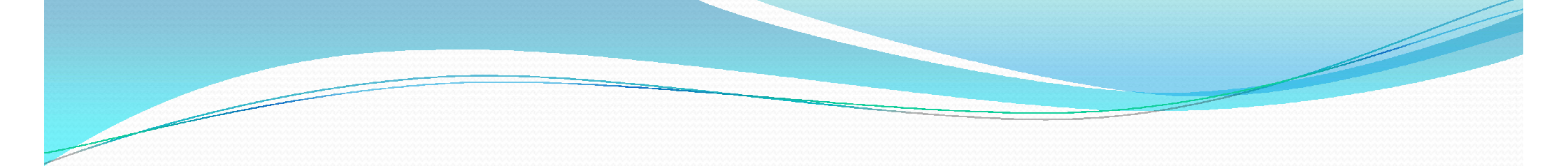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북	창출률(A=B+C)	18.4	20.3	18.9	19.1	20.6	23.3
	신규사업체 창출(B)	10.0	10.3	9.7	10.5	10.3	13.4
	기존사업체 확장(C)	8.4	10.0	9.3	8.6	10.3	9.9
	소멸률(D=E+F)	13.4	13.2	13.5	14.4	12.2	19.2
	퇴출사업체 소멸(E)	5.5	6.2	6.3	7.1	5.9	11.2
	기존사업체 축소(F)	7.9	6.9	7.2	7.3	6.4	7.9
	일자리 순창출률(N=A-D)	5.0	7.1	5.4	4.7	8.4	4.1

전국	창출률(A=B+C)	18.6	18.1	17.2	16.2	16.7	19.6
	신규사업체 창출(B)	8.3	7.6	7.5	7.3	7.7	9.2
	기존사업체 확장(C)	10.3	10.4	9.7	8.9	9.0	10.4
	소멸률(D=E+F)	12.6	12.3	11.3	12.6	12.4	14.8
	퇴출사업체 소멸(E)	4.9	5.0	4.3	5.1	4.9	7.4
	기존사업체 축소(F)	7.7	7.3	7.0	7.4	7.5	7.4
	일자리 순창출률(N=A-D)	6.0	5.8	5.8	3.6	4.4	4.8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지속률 (2005-2008년의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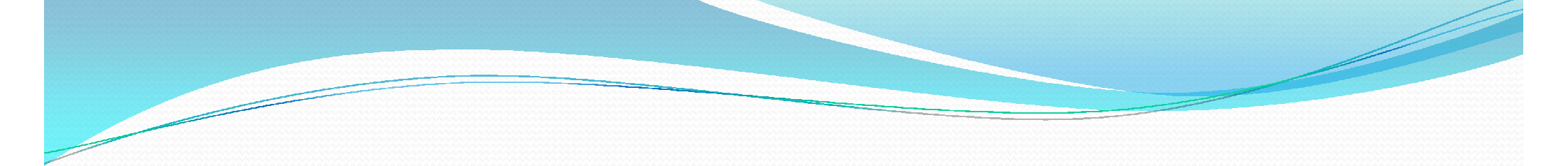
	전 사업체				5인 이상 사업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1년 지속률	2년 지속률	1년 지속률	2년 지속률	1년 지속률	2년 지속률	1년 지속률	2년 지속률
전북	66.6	54.4	86.9	81.3	68.4	56.2	80.2	71.9
서울	72.9	60.7	86.9	81.0	74.7	63.5	82.2	74.1
경기	69.6	55.8	87.6	82.5	70.6	57.3	83.1	76.2
그 외 지역	69.2	55.9	87.7	82.6	70.2	57.1	82.5	75.2
전국	70.4	57.4	87.4	82.1	71.8	59.3	82.5	75.0

주: 표의 수치는 창출 또는 소멸된 일자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1년 혹은 2년 이후에도 창출 또는 소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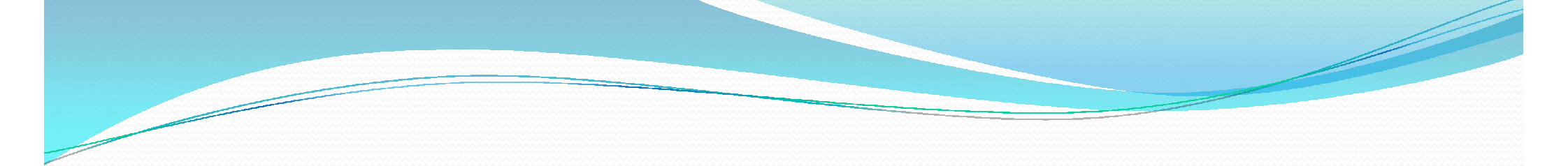


3. 선도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무비의 원리



4. 정책 제언

- 
1. 양질의 일자리에 중점: 일자리 안정성, 급여
 2. 산업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의 상충문제
 3. 지역 인력 수급의 분석을 통한 훈련 및
인력공급계획 수립 필요
 4. 일자리창출 목표에 대한 산정 근거 제시필요
 5. 대학 교과과정의 조정 필요
 6. 고용영향평가에 의한 지원 기준 설정 필요
 7. 타 부처의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 필요